

“7·30재보선 승리 위해선 공천갈등 해소 중요”

광주시의회 ‘지방선거 평가와 전망’ 토론회

“당 책임성 강화, 의회 엄격한 평가 장치 필요”

7·30 재보선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내 공천방식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29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6·4 지방선거 평가 및 7·30 재보선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지방군 조순대교수는 새정치연합의 공천방식을 지적한 뒤 경선방법 중 하나인 공론조사의 보완 등을 주장했다.

지 교수는 “최근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공론조사를 비롯한 후보공천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공론조사는 참여와 속의를 통한 후보공천이라는 점에서 국민참여경선보다 우월하지만,

당원에 기초한 정당조직의 정상화, 충분한 경선기간과 대표성이 보장되는 선거인단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의의를 실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적 보완을 지적했다.

지난 6·4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한 평가에서는 광주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일당지배체제가 강화되고 진보정당 위상이 약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지방군 교수는 “6·4지방선거를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새정치민주연합 중심의 1당 지배체제가 강화되었고 둘째 ‘몰락’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의 진보정당(군소정당)의 위상이 약화됐다”고 분석

했다.

그는 또 “비록 전남과 전북의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 선거에서 무소속 당선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주목할 만하지만, 이들이 대체로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에 반발한 이들이 탈당해 출마한 것이라는 점에서 독자적인 세력화를 추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강기정 국회의원은 “이번 광주시장 선거와 관련해 5인의 국회의원 지지선언과 중앙당의 전략공천 과정이 결과적으로 거칠고 강요된 방법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는 광주시의회와 호남정치학회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조경관 전남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강기정 국회의원, 민형배 광산구청장, 김보현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확보 부족, 이슈생산 부재 등으로 결국 패배한 선거”라고 평가했다.

강 의원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진보정당의 몰락으로 인한 진보적 이슈를 담아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내부적으로는 독점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혁신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정치의 윤리성을 확보하면서 의회에 대한 엄격한 평가 장치도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당이 책임성을 갖고 지자체 행정에 대한 견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는 광주시의회와 호남정치학회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조경관 전남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강기정 국회의원, 민형배 광산구청장, 김보현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월 소득 인정액 87만원 이하면 수령 가능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받고 있으면 불가

■ 기초연금 문답풀이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20만원이 지급되는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된다.

〈관련기사 10면〉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은 월 소득 인정액이 87만원 이하, 부부는 139만 2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에 따라 정해진다. 다음은 기초연금제도 문답풀이.

-기초연금은 누가 받나.

▲7월1일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87만원이며 부부가구는 139만2000원이다. 기존에 받던 기초노령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을 수령하고 있다면 받을 수 없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정하나.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월 소득 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48만원을 뺀 뒤 30%를 추가 공제하고 여기에 기타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더해 계산한다. 일용근로소득과 공공일자리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고급 자동차와 고가 희원권 가액 등을 고려해 평가한다.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w.go.kr>)나 복지포털(www.bokjiro.go.kr)에서 할 수 있다.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매월 25일 지급되기 때문에 7월 25일부터 받을 수 있다. 새로 신청하는 노인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단, 7월에 신청해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더라도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해 2개월분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이 결정되면 모두 20만원을 받게 되나.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거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등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액이 월 30만원을 넘게 되면 20만원 미만의 기초연금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거나 기초연금을 신청해 조사를 받은 뒤에 확인할 수 있다.

-부부는 둘다 20만원을 받을 수 있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받는 기초연금 금액의 20%를 감액하고 지급한다.

-자녀가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

▲원칙적으로 자녀 등 부양의무자를 제외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을 조사한다. 단, 본인이나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로 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이면 무료임차소득으로 적용해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킨다. /연합뉴스

시진핑 中 국가주석

내달 3~4일 국민 방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달 3~4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청와대와 중국 외교부는 27일 오후 시 주석 내외가 박근혜 대통령의 초청으로 1박2일 일정으로 국민 방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방한은 시 주석이 작년 초 국가주석에 취임한 이래 첫 방한으로, 북한 및 일본 방문보다 먼저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인민대회당에 모습 드러낸 中 북한대사 북·중 관계 실무를 담당하는 지재용 중국주재 북한대사가 지난 28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평화공존 5개 항 원칙 발표 60주년 기념식’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 대사가 다소 무거운 표정으로 내빈석에 앉아있다. 내주 방한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기념식 강연에서 주권평등, 공동안보, 반(反)테러, 공동발전, 공평정의 등을 주장했다. /연합뉴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방한 첫날인 내달 3일 한·중 정상회담과 국민 만찬을 하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이 자리에서 작년 박 대통령의 방중 이후 한중 관계의 발전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양국 관계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양국 간 협력방안, 지역 및 국제문제 등 다양한 관심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의 이번 방한은 지난해 6월 박 대통령의 국빈 방중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이뤄지는 것이며, 양국 정상이 취임 후 공식 회동하는 것은 이번이 5번째다.

이번 방한에서 가장 우선적인 의제는 북한의 핵실험 위협 등 한반도 긴장 상황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하면 북핵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과 과거사 부정 움직임에 대한 공동 대응 여부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무성 “5·18기념식 ‘임을위한 행진곡’ 제창돼야”

전대 앞두고 광주서 돛자리 투어

새누리당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무성 의원이 지난 28일 “차기 총리는 망국적 지역경쟁 해소 차원에서 호남출신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광주를 방문, 광주공원에 서 “상생공존의 정치와 새누리당의 미래”라

는 주제의 토론회인 ‘돛자리 공간 마당’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박 대통령에 대한 최근 지지율 하락을 언급하며 “과연 무엇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느냐”면서 “독선에 빠진 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인사 탕평책을 썼어야 하고, 호남 출신 장관이 몇 명 배출했

어야 한다”며 “호남 출신을 총리로 기용했다면 국민대통합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면서 호남정서를 자극했다.

김 의원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관련하여 “민주화 투쟁 당시 많이 불렀던 노래고, 저 또한 많이 불렀던 노래. 정부가 5·18 기념식 때 이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한 것은 유감”이라며 “5·18 추도식 때 반드시 제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이석형 ‘전남대 총학생장’ 경력 허위 표기 논란

검찰에 고발 당해

7·30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석형 전 함평군수가 경력 허위 표기 논란에 휩싸였다.

광주 남구에 사는 김모씨는 29일 “전남대 학도호국단 총학생장” 출신인 이석형 후보가 각종 게시물과 방송토론회 등에서 ‘전남대 총학생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며 “이는 경력을 허위로 기재·홍보·유포하는 것”이라며 검찰에 고발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언론사에 보낸 자료를 통해 “1949년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규정에 따라 발족한 학도호국단은 1960년 4·19 혁명이 성공하면서 폐지됐다”고 해 이석형이 성공하면서 폐지됐다”고 해 유신정부에 의해 다시 부활해 5공화국 군사정부 시절까지 존속한 단체로서 1980년대 대학 내 민주화운동에 의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총학생회가 조

직됐다”며 “따라서 민주화운동과 무관한 학도호국단 총학생장을 지낸 이 후보가 자신의 경력을 전남대 총학생장으로 기재·홍보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전남대 총학생장은 민주화운동과 연관돼 대중을 오인시킬 우려가 크다”며 검찰이 엄중한 조사를 거쳐 상응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이 후보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오인할 수 있는 “전남대학교 총학생장”으로 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당시 학보사 등 대학 내에서는 학생장으로 불렸기 때문에 ‘전남대 학생장’으로 쓰고 있다”고 해 명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06년 함평군수 출마 당시 경력을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기재했다고 선관위로부터 ‘정정지시’를 받았다.

/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Advanced Partner

보청기 사업부 인증 프리미엄 전문점

SIEMENS

지멘스보청기 프리미엄 상무점 OPEN 특가 이벤트!

상담만 받아도 배터리 1팩 제공

최신 청력평가 장비 도입

청각학 석사 전문가 무료 상담

SIEMENS 지멘스보청기 프리미엄 상무점 (미래로메디스(유) 보청기사업부) 문의전화 062)376-1010

시점: 신촌, 상무역, 신촌역, 신촌역, 신촌역, 신촌역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시술후

M.H.타사 신제품 기적공인기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특수가발 별매(윈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X,핀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점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대산프리모) 면적

大山프리모가발